

마니 행정학 기출 해설

- 국가직 7급 기출 해설 (213년 6월22일 실시) -

분석 해설 : 김만희 교수 (윌비스고시학원 행정학 대표강사)

<총평>

전체적으로 어느정도 적절한 배분의 행정학 시험이었다고 평가한다.
논란의 문제가되는 지문은 없었으며, 기본적 행정학 개념에 바탕을 둔 지문구성이 두드러졌다.

<난이도 분석>

- 전년대비 전체적 난이도는 평이하았다고 판단된다.
- 그러나,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는 행정학만 본다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경향 분석>

- 기존에 전형적 시험내용 영역에서 조금 벗어났다
(ex 예산이 아닌 결산이 출제됨)
- 과거의 단순단답형 지문이 감소되고 사고 측정적 경향의 문제가 증가하였다.
- 법령에 대한 출제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ex 국가정보화법, 지방자치법,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등)
- 이론적 배경이해와 개념확인형 문제가 기본 구성을 하였다.
- 특정영역에 치우지치는 않았지만, 일반적 수험범위보다 지엽적 영역까지 골고루 출제되었다.

<특이 사항>

- 전체 행정학 7편중 총론에서1문제가 출제되었다.
- 나머지 편에서 상대적으로 치중된 출제되었다.
- 국가직시험에서 지방행정 관련 3문제가 출제되었다.

<앞으로 수험 대응 방향>

- 행정학에 대한 암기적 접근을 지양하고, 이해중심의 접근이 절실하다
- 특정 빈출영역만의 공부아 아닌 전체적 균형있는 수험 준비가 요구된다.
- 행정학의 체계를 갖추는 수험 전략이 중요하다.

1.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은?

- ① 규모의 경제
- ② 정보의 비대칭성
- ③ X-비효율성
- ④ 외부효과의 발생

정답 : ③

<문제 근거> 마니행정학 P 39

<분석 해설>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비교 ●

구분	시장실패	정부실패(비시장실패)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완전경쟁 • 외부효과 : 대가없는 이익, 손해 • 개인효용과 사회효용의 부조화 : 공유지의 비극, 죄수의 딜레마 • 공공재의 존재 : 무임승차 • 경기의 불안정성 :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 정보의 비대칭성 : 대리손실 • 소득분배의 불공정 : 사회적 시장실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측면 : 정치인의 높은 시간할인율과 log-rolling, 이익집단의 압력과 영향력 증대 • 공급측면 : 독점성, 무형적 산출물, 생산기술의 불명확성, 종결 메커니즘의 결여 • 비용과 편익 절연 → 비용구조에 둔감 • 내부성 : 관료적 제국주의, 최신기술 집착 등 • 규제실패 : 지대추구와 포획현상 • X-비효율성 : 방만한 경영, 최신기술 미사용 등 • 파생적 외부효과 :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 과도한 복지정책 : 복지국가의 문제점 • 정보의 비대칭성 • 권력과 특혜에 의한 불공정 • 정부관료제의 병리현상
대책	정부규제, 정부개입	작고 효율적인 정부, 기업가형 정부
결과	규제실패, 정부실패	진행 중

문 2. 정책유형 중 국민들에게 권리나 혜택 또는 서비스를 나누어 주는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에 속하는 것은?

- ①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정책
- ② 그린벨트내 공장 건설을 금지하는 정책
- ③ 계층간의 소득을 재분배하여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 ④ 정부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자원을 동원하는 정책

정답 : ①

<문제 근거> 마니행정학 P 204

<분석 해설>

분배정책(distribute policy)

㉠ 의의

정부가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와 편익을 배분해주는 정책이다.

-> 예 : 수출특혜금융, 지자체에 국가보조금지급, 택지분양, 사회간접자본(도로, 항만등)확충 등

㉡ 특징

㉢ 낮은 가시성

비용부담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일반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 집행의 용이: 수혜자와 비수혜자가 직접적인 대결을 하지 않으며 집행이 용이하다.

->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익이 분산되는 개별화된 정책이다.

㉤ 개별화된 의사결정

-> 단순한 개별화된 의사결정이며 세부사업의 집합이 하나의 정책을 구성하는 것이다.

-> 참여자 간에는 정면대결보다는 나눠먹기식 결정이 이루어진다.

문 3. 정책의제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제가 사회적 유의성이 높을수록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 ② 단순한 문제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 ③ 극적인 사건이나 위기 등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 ④ 선례가 있는 문제들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정답 : ④

<문제 근거> 마니행정학 P223

<분석 해설>

① 문제의 중요성

영향을 받는 집단(이해관계집단)이 크고(많고) 문제의 내용이 대중적이고 중요한 것일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주의 이해관계집단이 크다는 것과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의제채택이 어려워진다.

② 쟁점화의 정도

관련집단들에 의하여 예민하게 쟁점화된 것일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크다. 갈등해결의 필요성 차원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③ 문제의 인지집단의 규모

문제를 인지(제기)하는 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④ 문제의 구체성

논란이 있으나 문제가 추상적일 때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정책결정자의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⑤ 사회적 중요성

사회전체에 주는 충격의 강도(파급효과)가 클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⑥ 선례의 유무

관련화된 문제일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⑦ 해결책의 유무

해결책이 있을수록 의제화 가능성이 높다.

문 4. 킹턴(J.W. Kingdon)의 ‘정책의 창 이론(Policy Window Theory)’에서,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정책의제로 형성되는 독립된 흐름이 아닌 것은?

- ① 정보의 흐름(information stream)
- ② 정치의 흐름(political stream)
- ③ 정책의 흐름(policy stream)
- ④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

정답 : ①

<문제 근거> 마니행정학 P 285

<분석 해설>

킹턴은 사례연구를 통해 쓰레기통모형을 이용한 정책흐름창 모형을 제시하였다.

- 정책문제의 흐름 : 일반 공중이나 정책결정자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집중시켜 문제를 규정하고 해결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게된다.
- 대안(정책)의 흐름 : 문제를 분석하고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로 공무원, 연구원, 학자 등으로 구성된 정책공동체가 활발한 활동을 한다
- 정치의 흐름 : 선거 등 정치적 사건에 의해 형성되며 주된 행위자는 대통령, 의회지도자, 이익집단대표 등이다

문 5. 위원회의 유형과 우리나라 정부조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자문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② 조정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③ 행정위원회 - 소청심사위원회
- ④ 독립규제위원회 - 경제관계장관회의

정답 : ③

<문제 근거> 마니행정학 P451~452

<분석 해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앙선거위는 독립규제위원회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조정위원회이다

(1)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board)

① 개념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권한행사를 하는 행정관청형 위원회이다.

② 기능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행사하며,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③ 예시 :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2) 독립규제위원회(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

① 개념

준입법적·준사법적 업무를 독립적인 입장에서 다루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 주로 규제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독립규제위원회라 하며, '제4부' 로 지칭된다.

② 연혁

19C 말 독점자본에 의한 미국 자본주의의 극심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규제 중심의 행정 위원회로서 가장 독립성이 강하다.

-> 1887년에 설치된 주간통상 위원회가 최초이다.

③ 발달배경

㉠ 사경제의 발전으로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는 정치적 독립성이나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였다

㉡ 규제사무의 기술적 복잡성·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전문가의 판단이 요구되었다.

㉢ 행정권의 비대화 방지 및 규제사무의 소관이 불분명하였다.

㉣ 지역적 대표성 또는 직능대표성 확립에 대해서는 기존 부처보다 합의제 독립기관이 용이하다.

④ 성격 및 역할

㉠ 독립성을 강조한다.

㉡ 합의제·회의식·분권적 의결·집행기관이다.

㉢ 준입법권·준사법권 : 독립규제위원회는 권력통합적 기관으로서 법률의 범위내에서 규칙제정권을 갖고 필요한 제재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준사법권)을 가짐

㉣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⑤ 문제점

행정부와 위원회 간 조정의 곤란, 민주통제의 곤란, 책임의 분산, 집행상의 지연, 보수성, 포획현상 (capture) 등의 문제점이 있다.

-> Brownlow위원회(행정관리에 관한 대통령 위원회, 1937)는 위원회를 '의회의 팔' 또는 '머리없는 제4부' 라고 비판하였다.

⑥ 한국의 독립규제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상 독립기관, 전형적 독립규제위원회, 9인), 국가인권위원회(비소속 독립기관, 11인의 인권위원), 금융통화위원회(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 7인), 공정거래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9인) 등이 있다.

문 6.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자의 퇴직급여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③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2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4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p>정답 : ②</p> <p><문제 근거> 마니행정학 P 651</p> <p><분석 해설></p> <p>해임은 원칙적으로는 연금등 불이익은 없으나, 금전적 비위로 해임된 경우는 퇴직급여는 감액된다.</p> <p>징계의 종류</p> <p>① 경징계</p> <p>㉠ 견책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에 그치는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6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된다. 징계의 한 종류이므로 처분 사유설명서가 교부되어야 한다.</p> <p>㉡ 감봉 직무수행은 가능하나, 1~3개월 동안 보수의 1/3을 감하여 지급하며 12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된다.</p> <p>② 중징계</p> <p>㉢ 정직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1~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다. 보수의 2/3를 감하여 지급하며 18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된다. 정직처분기간은 경력평정에서 제외된다.</p> <p>㉣ 강등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그 기간 중 보수의 2/3를 감하여 지급하며 18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된다.</p> <p>㉤ 해임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이다. 3년간 공직취임이 제한되며 뇌물등 금전적 비리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는 5년 미만은 1/8을, 5년 이상은 1/4을 감액하며 퇴직수당도 1/4을 감액 지급한다.</p> <p>㉥ 파면 강제 퇴직시키는 처분이다. 5년간 공직취임이 제한되며 퇴직급여는 5년 미만은 1/4을, 5년 이상은 1/2을 감액하며 퇴직수당도 1/2을 감액 지급한다.</p>

문 7. 국회의 결산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집행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통제기능과, 예산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심의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을 수행한다.
-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③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정답 : ④

<문제 근거> 마니행정학 P788

<분석 해설>

결산 심의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예결특위 위원장이 아니라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결산의 과정

- ① **출납사무의 완결**(출납정리기한) :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의 출납사무를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완결해야 하며 이를 출납정리기한이라고 한다. 다만, 당해년도 내에 완결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국고금관리법에서는 2월 10일까지 완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출납기한이라 한다.
- ②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
- ③ **감사원의 결산검사** : 감사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결산서류를 제출받으면, 이에 대한 검사·확인을 한 후 검사보고서를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송부한다.
- ④ **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 결산을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종전에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다음 회계연도 9월 2일)이었으나 국가재정법 제정과 함께 예결산 분리심의회 결산심사의 강화를 위하여 90일 이상 앞당겼다.
- ⑤ **국회의 결산심의회** : 결산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최근 결산심사 결과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문 8. 직위분류제의 출발에 영향을 미친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과학적 관리론 ㄴ. 종신고용보장
 ㄷ. 보수의 형평성 요구 ㄹ. 실적주의(merit system) 요구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정답 : ③

<문제 근거> 마니행정학 P603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

조정위원회

협의체

③ 행정협의회 협의체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④

지방자치단체

조합

협의체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행정협의회

정답 : ④

<문제 근거> 마니행정학 P981

<분석 해설>

① 행정협의회

㉠ 의의

가장 일반적인 광역행정방식으로서, 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현재 대도시권에는 대도시권 도시행정협의회가 있고 그 대도시권 안의 각 도시지역에 도시행정협의회가 중층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 협의회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과세권이나 집행권이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특별지방자치단체)

㉠ 의의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고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하는 법인격을 지닌 공공기관이다.

->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다.

③ 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

㉠ 의의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 협의체 설립신고 및 구성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당해 협의체의 대표자는 이를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협의체는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시장·군사·자치구의 구청장, 시·군·자치구의

회의 의장으로 구성된다.

문 10. 다음은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설명이다.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며,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국가가 납세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형식을 취한다.
- ㄴ.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 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 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 ㄷ.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한다.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고,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 ㄹ.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등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정답 : ④

<문제 근거> 마니행정학 P930

<분석 해설>

지방세 개편 내용이다

	도세	시, 군세	특별시, 광역시 세	구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문 11. 조직관리에서 수직적 연결을 위한 조정기제가 아닌 것은?

- ① 계층제
- ② 규칙과 계획
- ③ 수직정보시스템
- ④ 임시작업단(task force)

정답 : ④
<문제 근거> 마니행정학 P438·439
<분석 해설>
임시작업단은 수평적 연결을 위한 조정기제이다. 계층제, 규칙과 계획, 수직정보시스템은 수직적 연결을 위한 기제이다

문 12. 행정통제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실제 행정 과정에 대한 정보의 수집 나. 목표와 계획에 따른 통제기준의 확인 다. 통제주체의 시정조치 르. 과정평가, 효과평가 등의 실시
--

- ① 가→나→르→다
- ② 나→가→르→다
- ③ 나→다→가→르
- ④ 다→나→가→르

정답 : ②
<문제 근거> 마니행정학 P820
<분석 해설>
(1) 통제기준의 설정

통제기준이란 목표수행의 상황, 목표수행의 과정과 절차, 목표수행에 관한 개인적 책임 등을 명시하는 것이다.

(2) 정보의 수집

- ① 통제기준에 대응한 실천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선별한다.
- ② 행정통제의 주체는 통제대상에 대한 정보수집에서 전략적 통제점(strategic control point)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통제대상 및 출처와 종류를 표본 추출하여 단기간에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전략적 통제점 선정 시 고려기준**

- ㉠ 적시성
- ㉡ 경제성
- ㉢ 균형성
- ㉣ 포괄성
- ㉤ 사회적 가치성

(3) 성과의 측정과 평가

기준과 실적의 차질 유무를 확인하고 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4) 시정조치(feedback)

평가의 결과에 따라 평가주체는 시정조치를 취한다. 시정조치에 대한 결과는 통제중추에 환류되어 새로운 통제과정이 진행되기도 한다.

문 13.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 ② 직무 확장(job enlargement)은 기존의 직무에 수평적으로 연관된 직무요소 또는 기능들을 추가하는 수평적 직무재설계의 방법으로서,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 ③ 고위관리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 ④ 직무 풍요화(job enrichment)는 직무를 맡는 사람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직무수행에 관한 환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직무를 재설계하는 방법으로서,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정답 : ①

<문제 근거> 마니행정학 P363

<분석 해설>

전문화(분업)의 원리

① 의의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를 성질별로 구분하고 한 가지의 주된 업무를 분담시켜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문화(분업)의 유형

㉠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

* 수평적 전문화 : 직무의 범위(scope)가 얼마나 분업화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

* 수직적 전문화 : 직무의 깊이(depth)가 얼마나 분업화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

● 전문화와 업무성격 ●

구분		수평적 전문화	
		높음	낮음
수직적 전문화	높음	비숙련 직무(생산부서의 일)	일선 관리직무
	낮음	전문가적 직무	고위 관리직무 (조직의 정책과 전략을 결정)

㉡ 업무의 전문화와 사람의 전문화

㉢ 업무의 전문화 : 업무를 세분화하여 반복적·기계적으로 단순하게 처리하는 것

-> 직위분류제에서 강조되는 전문화이다.

㉣ 사람의 전문화 : 구성원이 전문교육을 통하여 전문가가 되는 것

-> 계급제에서 강조된다.

문 14.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리더는 부하의 욕구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고, 부하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통하여 리더가 제시한 과업목표를 달성한다.
- ② 부하의 변화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재량권을 부여하고 부하를 리더로 키운다.
- ③ 부하의 자기 실현과 존중감 등 높은 수준의 욕구 실현에 관심을 갖는다.
- ④ 조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다

정답 : ①

<문제 근거> 마니행정학 P 512

<분석 해설>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 의의

Burns 및 Watson & Rainey, Bass등이 주장하였다

-> 안정보다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거나 변화를 유도하는 최고관리층의 리더십을 말한다.

- > 변혁적리더십은 인간의 행태나 상황 뿐 아니라 리더의 개인적 속성도 다시 재생시키고 있으므로 신속성론에 해당하며, 기본적으로 카리스마적·영감적·촉매적 리더십과도 깊숙이 연관된다.
- > 통합이 강조되고 고도의 다양성과 적응성이 요구되는 탈관료제적 조직에 효과적이다.
- > 조직 변동 추구에 초점을 두고 조직과 개인의 공생적 관계를 형성한다.

㉠ 대두배경

종래의 행태론이나 상황론의 공통된 한계는 초점을 하급관리자에 두고 주로 부하와 상관과의 합리적이고 교환적인 거래관계에 기초한 교환적 리더십에 집착하고 있어 최고관리층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웠다.

- > 종래의 교환적·거래적 리더십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 특징 및 구성요소

㉠ 카리스마적(위광적) 리더십

㉡ 영감적 리더십(inspirational leadership)

- > 부하가 도전적 목표와 임무, 미래의 비전을 받아들이고 추구하도록 격려한다.

리더의 '특성' 보다 리더가 설정한 '목표(미래에 대한 구상)' 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위광적 리더십과 구분한다(Dipboye).

㉢ 지적 자극

교환에 의한 보상보다는 간단하고 심플한 방식으로 노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심볼(상징)을 이용하고, 중요한 목적을 표현함으로써 높은 기대치를 상호 공유함.

- > B.M. Bass가 주장한 '영향의 이상화' 와 관련됨.

㉣ 개별적 배려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적합하게 고려하고 개인의 존재가치(자긍심)를 인정하며, 부하개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인간적으로 배려하며 격려한다.

㉤ 촉매적(catalytic) 리더십(Luke)

리더는 연관성이 높은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며 부하들의 창의적 사고를 유도·자극하는 촉매작용적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이론이다.

- >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 관행을 타파하고 창조적 사고와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킨다.

문 15. 제도화된 부패(institutionalized corruption)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부패저항자에 대한 제재와 보복
- ② 부패행위자에 대한 보호와 관대한 처분
- ③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반부패 행동규범의 대외적 표방
- ④ 공식적 행동규범을 준수하려는 성향의 일상화

정답 : ④

<문제 근거> 마니행정학 P 680,682

<분석 해설>

체제화된 부패와 우발적 부패 - 부패의 제도화 여부

① 체제화(제도화)된 부패

- ① 케이든(G.E.Caiden, 1977)은 부패가 일상화되고 제도화되어 행정체제 내에서 부패가 실질적인

구범이 되고 바람직한 행동구범은 예외적인 것으로 전락되는 것을 체계화된 부패(systemic corruption)라 하고, 현대 행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파악하였다.

㉠ 체계화된 부패의 축적효과는 국민의식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불신과 불화의 사회풍토를 조성한다.

② 우발적(일탈형) 부패

부정적인 관행이나 구조보다는 개인의 윤리적 일탈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부패로서 일시적 부패를 의미한다.

문 16.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무원직장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 ① 5급 일반직 공무원
- ②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공무원
- ③ 5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④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정답 : ②

<문제 근거> 마니행정학 P671

<분석 해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무원직장협의회는 6급이하 공무원이 가입하며, 협의만 가능하다(단체협약은 안됨.)

공무원직장협의회

① 근거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998. 2. 24제정)

② 구성과 가입탈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협의회만 가능하며(전국단위 협의회는 금지),

구성원은 가입탈퇴의 자유가 보장된다.(open shop)

③ 가입대상

㉠ 가입가능 :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 6급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행정직·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 가입불가 :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과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 또는 자동차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문 17.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③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 ④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 ③

<문제 근거> 마니행정학 P973

<분석 해설>

자치사무는 위법성에 대해서만 감사대상이된다.

지방자치법 172조

㉠ 행정관리적 측면

- ㉡ 자치단체는 행정수행 과정에서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감독기관은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조언·권고·지원 등을 통하여 지도·지원한다.
- ㉣ 감독기관은 국가위임사무에 대하여 명령·강제·처분 등을 통하여 지도·감독한다.
- ㉤ 자치단체가 사무 일부를 하급단체에 위임·위탁하는 경우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 감독기관 및 감사원은 자치단체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 ㉦ 자치단체장이 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해태하고 있는 경우 감독기관은 직무이행을 명령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할 수 있다. 이행명령에 자치단체장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명령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감독기관은 자치단체 간 분쟁의 조정, 지방행정협의회의 협의사항의 조정, 자치단체의 폐지·분합 시 사무 및 재산의 승계의 지정 등을 할 수 있다.
- ㉨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지방자치법 제169조) : i)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ii)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iii) 자치단체의 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 18. 국가정보화기본법 상 정보화책임관의 담당업무가 아닌 것은?

- ①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 ②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 ③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 ④ 전자정부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p>정답 : ③</p> <p><문제 근거> 마니행정학 P 874</p> <p><분석 해설></p> <p>정보화책임관(CIO ; Chief Information Officer)</p> <p>㉠ 개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으로 만들어진 직위로서, 조직의 정보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며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고위직 간부이다. ㉢ CIO는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책기획능력, 업무파악 및 조직혁신능력, 정치적 능력(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협상 및 설득), 벤치마킹능력(정보화 관련 성공사례의 도입) 등을 고루 갖추어야 하며 정보를 전략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보자원관리(IRM;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의 핵심적 인적 요소이다. <p>㉣ 기능</p> <p>IRM + 정보화 사업 총괄 + BPR</p> <p>㉤ 우리나라 정보화책임관(CI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근거 : 1999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개정하여 정보화책임관(CIO) 규정을 신설하였다. ㉢ 법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평가, ㉣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정보화와 연계·조정, ㉣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동 활용 방안의 수립, ㉤ 행정업무의 정보화 촉진 ㉣ 정보화책임관협의회 : 국무총리실장을 장으로 하는 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훈령).

문 19.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전에 결정된 예산의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한다.
- ② 부처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예산제도로 상향식(bottom-up) 방식이다.
- ③ 중기적 시각에서 정부 전체의 재정규모를 검토하기 때문에 전략적 계획의 발전을 촉진하고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 ④ 미래예측을 강조함으로써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관행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정답 : ②

<문제 근거> 마니행정학 P 807

<분석 해설>

총액배분자율편성제(top-down budgeting) - 사전재원배분제

㉠ 의미

재정당국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재정연도별 재정규모와 분야별·부처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하면 각 부처가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당국이 이를 점검·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 특징

- > 정부 각 기관에 예산 자율권을 부여하는 예산관리모형이다
- > 점증주의적 관행을 바꾸는데 기여한다.
- > 자금관리의 분권화를 강조하지만 의사결정의 주된 흐름은 하향적이다.
- > 국가 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강조하고 그에 필요한 중앙통제를 인정한다.
- > 단기적 시각의 예산편성방식이 갖는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 시각의 재정운용을 도모한다.

*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②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③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연계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기금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 기존예산제도와와의 비교 ●

기존 예산제도	총액배분자율편성제
단년도 예산편성 중심(거시적 재원배분 곤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경기대응 및 조절)
상향식(Bottom-up) (각 부처 예산요구 → 예산기관 대폭삭감 → 편성)	하향식(Top-down) (지출한도 설정 → 각 부처 자율편성 → 종합편성)
각 부처 과다요구 관행 및 예산사정기관과의 마찰 (예산요구 증가율 25%)	과다요구 관행의 축소 및 예산사정기관과의 마찰 감소(예산요구 증가율 5%)
예산투입에 치중	성과관리에 중점(성과관리제와의 연계)

문 20. 집단적 문제해결의 전통적 방법을 수정한 대안과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하지 않은 것은?

① 델파이기법(delphi method) -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면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각각 독자적으로 형성한 판단들을 종합·정리하는 방법이다.

②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참가자들이 될 수 있는대로 많은 독창적 의견을 내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이미 제안된 여러 아이디어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편승기법(piggy backing)의 사용을 지양한다.

③ 변증법적 토론(dialectical inquiry)- 두 집단으로 나누어 토론을 하기 때문에 특정 대안의 장점과 단점이 최대한 노출될 수 있다.

④ 명목집단기법(nominal group method)- 개인들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구상하고 그에 대해 제한된 집단적 토론만 한 다음, 표결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정답 : ②

<문제 근거> 마니행정학 P 259,260

<분석 해설>

①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 의미

오스본(A. Osborne)에 의하여 창안된 집단토의 기법으로서 어떠한 제약 없이 즉흥적이고 자유스러운 분위기하에서 전문가의 창의적 의견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직접적인 대면접촉 토의를 통하여 창안하는 주관적·질적 분석기법이다.

->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도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 내용

㉠ 비판엄금 : 다른 사람들이 제시하는 아이디어를 절대로 평가·비판·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자유로운 상상을 허용하게 한다.

㉡ 자유분방 : 가급적 아무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말한다. 문제와 관계가 없거나,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급진적인 아이디어도 허용한다.

㉢ 질 보다 양 : 제안되는 아이디어는 많을수록 좋다.

㉣ 결합개선 :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결합하거나 수정·추가·모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 => 편승기법(piggy-backing)

㉤ 아이디어의 평가와 종합 : 모든 아이디어가 제시되면 유사한 아이디어의 취합, 실현 불가능한 아이디어의 제거 등을 통하여 몇 가지 대안을 선정한다.